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출범… 산업구조 혁신 이번에는 가능할까

- 산업구조 개편, 다단계 하도급 개선,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등 추진 -

나 경 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econa@cerik.re.kr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 협의체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지난 4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했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 위원회는 (1)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과 (2)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 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쟁점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혁신위원회’는 모든 쟁

점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각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전에 대해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5월경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쟁점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

건설산업혁신위원회

(1) 건설산업 구조 개편

①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②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

(2) 공공사업 효율화

①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② 공사원가 산정 체계 개선

최하여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9월까지 세부 실천 방안(action plan)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혁신위원회는 ①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간 이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②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며, ③건설업 등록 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④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우량 업체를 선별하고, ⑤공공 인프라의 품질·안전 확보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공사비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참고로 지난 5월 4일 건설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제1 전문위원회의 킥오프(kick-off) 회의가 있었으며, 5월 11일에는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한 제2 전문위원회의 킥오프 회의가 개최되었다.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로 개최될 예정이다.

건설산업 업역 체계의 혁신은 그간 무수히 정책 의제로 등장했지만 세부 실천 방안의 추진에서는 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 번번이 무산됐었다. 일례로 10여 년 전인 2009년에도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동일한 의제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들이 존재했었지만 결국 서랍 속으로 들어간 바 있다. 이번만큼은 그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산업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건설산업의 생존 차원에서 선진화된 건설산업으로 가느냐, 도태되느냐

하는 절박한 인식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 외국의 경우, 건설산업 혁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지속적으로 제도 혁신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잘 관리해야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도 혁신이 전제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혁신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국토교통부를 넘어서는 범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시공 중심의 업역 체계 개편 논의를 넘어서, 건설 생산 과정 전반의 업역 체계 혁신으로 더욱 진화·발전하기를 기대한다.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건설 생산 및 발주체계 개편 논의도 더욱 진전돼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입증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도입은커녕 도입을 위한 논의조차 어려운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얽히고설킨 제도적 문제점(등록기준, 업종, 업역, 발주제도 등)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은 현존하는 수천 가지 것들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¹⁾라며, 혁신에 대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우리도 과거의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번 ‘건설산업혁신위원회’도 비판적 시각에서 점진적 개선보다는 혁신적 개선 및 부작용 최소화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해본다. **END**

1) Steve Jobs, “Innovation means saying ‘No’ to a thousand things.”